

민주 '내란 상설특검·일반특검·국조'尹 탄핵 3중 압박

검찰 수사 불신임...시행령 수사 금지 처분·특수본부장 탄핵 추진

"尹 체포·구금·수사하고 내란 부역 국힘 해체해야" 전방위 공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재표결을 앞두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대한민국 근 통수권은 여전히 윤석열에게 있고 지휘계통은 불명확하다"며 "헌법상 탄핵에 의한 직무정지나 긴급체포·구속에 의한 실질적 직무정지 중 하나를 빨리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탄핵안의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주철현(여수갑)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 주도 세력과 당장 결별하고 국민 곁으로 돌아오라"며 "탄핵 투표 찬성이 어렵다면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을 면하고 그나마 양심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공세와 더불어 윤 대통령의 사법적 처리와 비상계엄이 가진 위헌·위법성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도 쓸 수 있는 카드를 모두 동원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이날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까지 발의했다.

민주당은 앞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별도로 발의한 데 이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또 계엄 사태에만 일반 특검과 상설특검, 국정조사 등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민주당이 이처럼 특검과 국정조사에 집중하는 이유 중 하나는 특별수사본부 부장직을 내선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8일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야권은 특별수사본부 부장직이 국민의 힘 한동훈 대표와 고교·대학교 동문임을 들어 수사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민석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수사가 사나리오 수사로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동훈 장관 시절 만든 불법 시행령에 의한 내란 수사를 긴급히 금지하는 처분과 수사본부장 탄핵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법정상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는데도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만든 시행령을 근거로 수사하고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고 경찰과 특검을 중심으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정 수습' 담화 발표와 관련한 개혁신당 최고위원 당협위원장 합동 규탄선언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힘 원내 지도부 공백에 탄핵·특검·예산안 공세 대응 '올스톱'

12일 의원총회 후임 원내대표 선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공백 상황이 이어지면서, 야당의 몰아치는 탄핵·특검·예산안 공세에 여당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9일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저의 원내대표 사퇴 의사는 확고하다"며 "새 원내대표 선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정족수 미달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폐기된 직후 '국정 혼란을 막지 못해 송구하다'며 사의를 밝힌 데 이어 거듭 사퇴 의지를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추 원내대표 사의 표명 이후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 구성원 전원도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당내에선 당장 10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원내 전략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10일 본회의에서 '감액 예산안'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도 같은 날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아울러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10일 보고해 1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태세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은 12일 본회의의 보고를 거쳐 14일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예산안 협상은 물론 각종 탄핵안과 특검법안에 대해 당의 입장을 정할 원내 리더십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새 원내지도부 선출 여부를 놓고 계파 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공백 상태가 길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진윤(진윤석열)계·중진 의원들은 앞선 의원총회에서 추 원내대표에 대해 '재신임' 결론이 난 것을 내세워 추 원내대표에게 복귀할 것을 계속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상황이 긴박하게 흘러가는 만큼 야당도 상대로 각종 협상을 이끌어 온 추 원내대표가 연속성을 가지고 원내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한동훈 대표 측은 추 원내대표의 의지가 완강하며 복귀 요청을 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친한계 일각에서는 중진 의원들의 이름이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오르내리는 등 조속히 원내 리더십 공백을 메우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오는 12일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다고 파악됐다. 추 원내대표는 나경원·윤상현(5선), 김도읍(4선), 김성원·성일중·송석준(3선) 의원 등이 본인의 출마 의사와 상관 없이 거론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추경호 의원직 제명추구 결의안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9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의원직 제명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추 원내대표에 대한 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추 원내대표는 내란에 가담한 정도도 아니고 주범"이라며 "당 소속 의원들에 국회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계엄이 실질적 성과를 얻을 수 있게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추 원내대표를 의원은 물론, 원내대표로도 인정할 수 없다"며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내란죄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추 원내대표 측은 민주당의 주장에 시간대별 상황을 공개하며 반박한 바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 "즉시 탄핵...한·한 헌정파괴 공범"

개혁신당은 9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정 수습' 담화 발표와 관련해 "윤석열 정권의 헌정 파괴를 방조한 공범으로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은아 대표를 비롯한 개혁신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위법 행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탄핵과 법적 심판은 선택이 아닌 필연이다. 탄핵 이외에 우회로는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 대표에 대해 "대통령 권한을 대리하거나 직무를 대행할 법적 근거 없음에도 무책임한 발언과 행보로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을 부정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이자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전연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한 총리는 대통령 대리인을 자처하며 국민을 향한 경고를 남발하고 헌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독단적 발언으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여 정국안정화 TF 구성...위원장에 3선 이양수

"조기퇴진·하야 등 제한 없이 논의"

국민의힘은 9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의 정국 수습 방안과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국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3선 이양수(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이 맡는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파악됐다. 추 원내대표는 나경원·윤상현(5선), 김도읍(4선), 김성원·성일중·송석준(3선) 의원 등이 본인의 출마 의사와 상관 없이 거론되고 있다. /연합뉴스

회의를 통해 여러 사안을 점검하고 결정해 당과 국민에게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임기 단축 문제도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TF 목표 자체가 정국을 조기 안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주제나 여러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그것 역시 포함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답했다.

또 김용태 의원이 제안한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특검법 도입과 관련해서는 "오늘 의총에서 여러 안들이 나왔다"며 "그 안을 다 놓고 저희가 하나 하나 어떤 것이 가장 논리적이고 합리적인지 논의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조기 퇴진 시한과 하야 등의 문제도 TF에서 제한 없이 논의할 예정이라고 이 의원은 전했다. /연합뉴스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북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